

光则日뢖



민주화세력, 지방정부 정계개편 이루나

박근혜 탄핵 1년···촛불민심에 시민사회·386 인사 대거 출마 현 정권과 '민주화 인맥' 형성 ··· 향후 호남 발전에 도움 기대

'촛불 민심'으로 시작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지지난 10일로 1년이 지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오는 6월 13일 첫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촛불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 택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는 1980년대 군부 독재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386세대와 시민사회 등 민주화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들의 선거 결과 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기존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기반을 후배에게 물려주던 '보수 패 거리 정치'에서 벗어나 시민의 힘으로 탄 생한 정권 속에서 민주화 세력을 중심으로 지방 정부 정계개편이 기대되고 있다.

시청 성구 성계개편이 기대되고 있다. -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정권 전면에 등 장했던 '386 민주화 인사'의 정치 참여가 중앙정부 중심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 과에 따라 이들의 '풀뿌리 지방자치' 진출 도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대조적이다.

11일 각 정당과 지방정가에 따르면 광주 시장·전남지사 선거에 과거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386세대와 시민사회 인사 등 민주 화운동 세력이 대거 후보군에 포진돼 있다.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 문위원장, 최영호 남구청장이 광주의 대 표적 학생 운동권 출신 386세대로, 윤장 현 광주시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이 시민사회 인사로 분류된다. 여기에 전남 지사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신정훈 청와 대 농어업비서관이 대표적 386세대로 꼽 한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에 시민사회 대표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1987

년 연세대 총학생회 출신인 우상호 국회의 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는 1980년대 민변활동을 해온 전해철 국회의원이 준비중이다. 경남도지사 선거 에는 김경수 국회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인호 부산 시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인사는 "광주·전남 지방선거에 민주화 인사들이 대거 뛰어든 것은 전국 정치 지형과도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며 "1980년대 함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핵심에 포진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 민주 인사들의 출마가 늘어난 것이고, 이는중앙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화 세력을 함께 묶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지닌 현 정권과의 '민주화 인맥'은 향후 호남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예산과 정책 지원등 정부를 상대로 호남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분석 때문이다.

또한, 전국적인 민주화세력 인사들의

출마 바람은 '촛불 민심'으로 세운 현 정부의 이념과 무관치 않아 보이며, 기존 지방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통해 촛불을 상징하는 민주화세력의 결집 의도가 엿보인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이들의 연대 선거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386세대를 비롯한민주화세력이 '풀뿌리 정치'에서 전면 부상할지 여부가 주목되며, 이러한 바람이호남에서부터 시작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화운동 등의 전력 도 좋지만, 지역발전 비전과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 인사들의 출마 행보는 촛불로 세운 이 정부의 이념과도 무관치 않다"면서 "이들이 지역 행정을 맡아 촛 불집회 이후에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지 방 개혁을 이끌어 낼지 여부가 이번 선거 의 최대 관심사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99년 전 그 날처럼 … 수피아여고 "대한독립만세"



지난 10일 오전 광주 양림동 남구 수피아여고에서 열린 '광주독립만세운동 99주년 재현행사'에서 학생들과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앞세워 만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 광주일고(28회), 서울대 법대(83학번) 졸업 * 사법시험 합격(31회), 사법연수원 수료(21기)
- * 광주지방법원 및 순천지원 판사 * 과즈고드버의 파사
- * 광주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 목포지원장
-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목포시, 광주 동구,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박 강 회** 올림

▶업무개시: 2018. 3. 5.(월) ▶개업장소: 광주 동구 동명로 106. 3층

(지산동, 우성빌딩) ▶개업소연 : 2018. 3. 30.(금) 오후 5시부터

전 화 062)**228-3500**

팩 스: 062)**228-3501**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www.kwangshin.ac.kr

한반도 '평화의 봄'

4월 남북정상회담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 냉전구도 풀릴 듯

임종석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남북 실질합의 도출 준비 나서

남북이 4월 말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중에 열릴 가 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로 일촉즉발의 긴장 구도를 이어온 한반도 에 봄이 오지 않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 다. 〈관련기사 2면〉

오는 4월 말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5월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져 한반도의 냉전 구도가 풀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후속조치 노력 정도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숙 성 과정은 물론 그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에서 극도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 근하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의 지시로 꾸 려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과 관련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대북 협의를 담당한다.

청와대는 물론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망라될 것으로 보이는 준비위는 회의 등을 통해 의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준비위 구성이 완료 되는 대로 이번 주첫 회의를 가질 것"이라 며 "일단 통일부가 실무 중심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난관 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대좌가 현실화할 때까지 계속될 북미 간의 '기 싸 움'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실제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구체적 행동을 보지 않고는 (김 위원장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도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불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국과는 굳건한 최고위급 상시소통 채널을 통해, 북한과 는 단계별 소통 라인은 물론 이미 합의한 김 위원장과의 핫라인을 활용해 자칫 발생 할 수 있는 북미 간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주변국 은 물론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도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 조작·왜곡 '육군 80대책위' ▶6면



'빙판 위 메시' 신안출신 정승환 ▶20면

헌법자문특위, 정부 개헌안 오늘 확정…내일 靑 보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 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전 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 (이하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 날인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1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초 안에서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 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2차 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임제가 아닌 1차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대통령 4년 연임 제'가 초안에 담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초안에 포 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명시 된 3·1 운동과 4·19 혁명 외에도 5·18 민 주화운동과 6·10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 방안도 초안에 담 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13일에 초안을 보고받은 후 이를 그대로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권력구조 개편 등 일부 쟁점을 놓고서 는 여야의 대립이 워낙 첨예한 탓이다. 이 때문에 초안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부분만을 발췌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타는 군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